

임업 조세 혜택, 농업 분야 대비 극히 ‘미미’

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불평등
주철현 “李정부 임기내 반드시 개선”
산림청장 “재정당국 협의 해결 앞장”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해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 임목 벌채로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준보전산지는 아예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고 보전산지도 10년 이상 직접 산림을 경영한 경우에만 겨우 10% 감면받게 된다. 이후 10년당 10%가산돼 최대 50년을 경영해도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평생을 바쳐 산림을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절반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증여세 역시 농지는 진흥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감면되는 것과 달리, 산지는 보전산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모든 농지에 대해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와 재산세 분리과세도 산지는 오직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될 뿐이다.

주철현 의원은 “2024년 임가 당 평균 소득이 3천800만원에 불과해 농가 평균 소득 5천100만원의 75% 수준에 불과한데 세제 혜택은 오히려 농가보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임업인 권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로막는 산지와 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업인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4심제’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지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 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법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정진욱 “기술자립 허위 프레임 ‘매국 협정’ 원인”

한수원·한전, 美WEC 체결 협정

‘거짓 논리’로 K-원전 미래 날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 갑)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10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윤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 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였다”며 “바로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0% 기술 자립’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 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와 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에너지부의 개입,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석유공사, ‘하베스트’ 매각에 혈세 3조 쏟아부어

2009년 인수후 9조…30%는 최근 3년간

권향엽 “관여자는 現 ‘얼굴마담’ 부사장”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천500만 달러(한화 약 3조1천500억원)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3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 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석유공사는 거래 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자를 단행했다. 결국 부실기업 하베스트의 기존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셈이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16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매각 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남은 22개 그룹

에 대한 예상 매각가는 협상 중이어서 ‘비공개’”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과목 석유공사 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점이다.

과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3년 전인 2008년부터 캐나다 사무소에 근무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도 하베스트 이사회의의장으로 지난해 말 캐나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여전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관계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하베스트의 담당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석유공사의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자원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